

#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정책 연구계획서

사회복지학과 2026210335

이민호

## 1. 연구제목

한국의 합계출산율 반등 분석 : 가족주의 정책과 탈가족화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2. 문제의식

현재 선진국에서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지난 2006년에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약 700조 원의 조세를 투입했다. 하지만 순수 저출산 대책 예산은 1차 계획 당시 19조 1,000억 원에서 4차 계획 195조 8,000억 원으로 10 배 이상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TFR)은 1.13명에서 0.8명대로 오히려 급감했다(강지원 외, 2025). 이는 과거 1차 계획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김희찬, 2018; 김지성 외, 2023; 한광수, 2024).

해소되지 못한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선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2064년에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예상 연도는 출산율이 1.2명을 기준으로 잡고 추계한 것이다. 즉, 출산율이 1.2명대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의 기금은 더욱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높게 유지된다면, 2090년까지 기금의 고갈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은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높는데, 한국의 경우 2025년 기준 경제성장률이 1%에 불과하다(국가데이터처, 2025).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위험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다른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김태일, 2023). 추가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점이 도래하여,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세대 간 갈등이 현재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한광수, 2024). 이는 국민연금 기여 및 배분에 관하여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등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정성호, 2018; 황선재, 2022; 차진아, 2024).

둘째,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감소이다. 앞서 언급했듯 2025년 기준 경제성장률은 1%이다. 이는 세계 평균인 3.2%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OECD, 2025). 여기서 생산가능인구는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59% 감소한다(유진성, 2023). 한국은 이미 2016년 기준 생산연령인구(15~64)가 3,760만 명을 정점으로 장기적인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2060년에는 2,058만 명으로 급감하여 2020년 대비 약 55.1%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따라서 현재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미래의 한국 경제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황선재, 2022; 황인도 외,

2023; 한광수, 2024; 하준, 2025).

셋째. 고령 인구에 대한 부양비 증가와 복지 및 의료 비용의 부담이다. 한국은 이미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국토연구원, 2022).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의 진입 속도가 7년으로, 일본의 10년에 비해 3년이나 빠르다(국가데이터처, 2022). 급속도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현재 31.8%에서 2070년이 되면 100%가 돌파할 예정이다(국가데이터처, 2019). 이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하고 있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향후 노인 의료비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정순돌 외, 2012; 박기묵, 2017; 관계부처 합동, 2020; 황선재, 2022; 하준, 2025).

넷째. 지방 소멸 현상의 가속화이다. 이는 청년 인구가 양질의 직장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다(임태경, 2023). 이에 지방에서는 생산성 및 소비력 저하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 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가 나타난다.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 여건이 다시 출산율을 떨어뜨려 인구 유출과 경제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된다(허문구, 2022; 차건환 외, 2023; 하준, 2025). 그리고 줄어든 인구로 교육, 의료, 교통 등의 필수 인프라의 유지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미 농어촌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초·중학교 폐교가 급증하고 있다. 추가로 지자체의 조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자립도를 약화시키는데, 결국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행정 서비스나 노인 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복지 정책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낮춘다. (조임곤, 2020; 하혜형 외, 2021; 홍선미, 2024; 차진아, 2024)

### 3. 선행 연구 분석

#### 1) 이론적 배경

저출산 정책은 크게 가족주의 정책과 이와 반대되는 탈가족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저출산 정책 분석을 위해서 탈가족화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탈가족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론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에스핑-앤더슨은 1990년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개인이 노동시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을 팔지 않아도 국가의 복지제도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탈상품화'로 정의했다(Esping-Anderson, 1990). 그리고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했다. 그러나 루이스를 비롯한 페미니스트 복지국가 학자들은 탈상품화에 대한 정의가 '남성 생계부양자' 관점에서 서술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전담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의 관점을 간과한 것이다(Lewis, 1993; Orloff, 1993). 이에 학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에스핑-앤더슨은 '가구원이 가족 관계에 종속되거나 가족 내부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돌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탈가족화(Defamilization)'라고 개념을 정의했다(Esping-Anderson, 1999). 그리고 Lister는 '혼인 및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돌봄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적당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탈

가족화를 정의했다(Lister, 1994). 이외에 국내 연구 중 윤홍식 외(2010)는 '진정한 탈가족화란 개인이 유급노동, 여가, 교육훈련 등을 위해 무급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는 적극적 권리'라고 탈가족화의 개념을 정립했다. 또한 김지미(2018) 연구에서도 '탈가족화는 가족돌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공적인 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가, 시장, 지역 공동체에 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가족의 돌봄노동 부담이 완화되는 정도'로 정의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탈가족화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족의 돌봄노동 부담을 완화하는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가족주의(Familialism)란 '아동 돌봄, 노인 부양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국가가 아닌 가족(가구)에 있으며, 정부는 가족이 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만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개념을 정의한다(Esping-Anderson, 1999). 이 개념에 따른 가족주의 저출산 정책에는 현금급부 및 유아휴직, 부모휴가가 해당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노동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급한 지원금으로 시장에서 돌봄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유아휴직을 통해 돌봄노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학자에 따라 가족주의 정책을 '재가족화(Refamilization)'로 명명하기도 한다(류연규, 2007; 송다영 2012, 전윤정, 2015; 山下順子, 相馬, 2024).

## 2) 가족주의 정책의 선행 연구

가족주의 정책이 합계출산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충환 외(2013)의 연구는 전국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중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인 '출산장려금'만이 유일하게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현금 급부의 효과는 최근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재차 확인되는데, 최정은 외(2026)의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출산 지원금은 주거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도권에서 뚜렷한 정(+)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준욱 외(2010) 역시 이러한 현금성 출산장려금이 가임 여성의 출산 계획을 유도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임을 증명하였다. 한편,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시간을 보장하는 육아휴직 역시 가족주의 정책의 핵심으로서 출산을 제고에 크게 기여함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박경량(2021)의 연구에서는 탈가족화 제도(보육비 지원)보다 가족화 제도(육아휴직)가 직장 여성의 기대 자녀 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최은희 외(2016)의 연구에서도 육아휴직 지원 급여가 합계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현금성 지원과 휴가 제도로 대표되는 가족주의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 3) 탈가족화 선행연구

선행 연구에서 탈가족화 정책이 돌봄의 사회화를 이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단독으로 출산율 제고로 직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류연규(2007)와 김수정(2006)은 탈가족화 정책이 여성에게 전가되었던 무급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여 여성의 노동권 보장 및 성평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고 입증하였다. 그리고 송다영(2014)과 전윤정(2015)의 연구는 한국의 보육정책 등 탈가족화 과정이 구

조적으로 지체되거나, 현금성 지원 방식인 암묵적 가족주의로 회귀하면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여전히 가족(특히 여성)에게 머무는 정책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황은정 외(2014)와 이승윤 외(2014)는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보육 서비스 중심의 탈가족화 정책이 강하더라도, 남성의 돌봄 참여를 이끄는 '탈젠더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여성의 이중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장기적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입증하였다. 종합하면 김희찬(2018)이 분석한 바와 같이, 탈가족화 정책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나, 합계출산율을 실질적으로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돌봄의 시간적·금전적 기회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탈가족화 정책 및 성평등을 향한 탈젠더화 정책과의 전략적인 결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4) 2024년 이후 합계출산율 반등 원인 분석 연구

2024년부터 반등한 합계출산율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정 외(2025) 연구에서는 2024년 이후의 출생아 수 반등 현상을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최근 출산율 상승이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성공이나 구조적 위기(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가 해결되어 나타난 구조적·지속적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신 인구 모수가 많은 '에코세대(1990년대 초반생)가 주 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인구 구조적 특성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뤄졌던 결혼 및 출산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템포 효과(시차 효과)에 의한 단기적 상승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반등을 장기적 추세로 굳히기 위해서는 혼인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완화하고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정책 재설계를 주장했다.

김상용(2025)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 출산율 반등의 원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에 비해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다음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여성의 합계출산율 상승 폭이 높았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오히려 출산율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직장가입자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출산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사업의 확대와 홍보 강화를 통해 정책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6)에서는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주거 안정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 및 현금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발휘했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30대 부부의 추가 출산을 긍정적으로 유도했다고 분석하며 정책의 효과를 강조했다.

선행 연구를 분석하면, 첫째,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존재한다. 즉, 가족주의 정책 및 탈가족화 정책의 효과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공존한다. 이는 정책을 전개할 때 선택의 어려움을 줄 수 있어, 큰 혼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최근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준 정책을 파악한다면, 그 정책에 대한 예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정책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최근 출산율 반등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2024년부터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

하다면 상승 곡선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부정확한 분석으로 인하여 정책이 잘못된 경로로 전개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경로 의존성에 따라 변혁이 어려우므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준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입증함으로써 상이한 관점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되어야 하는지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4. 연구 목적

지난 20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돌봄의 주체와 지원 방식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가족주의 정책'과 '탈가족화 정책'으로 구분하고, 이들 정책이 실제 합계출산율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정책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국가 복지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질문으로,

첫째. 가족주의 정책과 탈가족화 정책은 합계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가족주의 정책과 탈가족화 정책 중 합계출산율 증가에 상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무엇인가?

#### 5. 연구 방법

<연구 가설>

가설 1. 가족주의 정책과 탈가족화 정책은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2. 가족주의 정책과 탈가족화 정책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미친 영향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주의 정책과 탈가족화 정책이 한국의 합계출산율(TFR)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 경제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통제하여 각 정책의 상대적 기여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 1) 데이터 구성을 위한 자료 수집

· 독립변수(가족주의 정책 및 탈가족화 정책) : 정부 및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기조를 파악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3, 2024)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을 전수 조사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위기 대응전략: 저출산 대응 전략』 보고서를 결합하여, 단순 예산 편성이 아닌 실제 집행된 정책 예산의 비중을 추출한다.

· 종속변수(합계출산율) 및 통제변수(사회 및 경제적 지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KFPS)』 10차(2024년) 및 11차(2026년 예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의 실제 출산 행태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통계청 국가데이터포털(KOSIS)의 시도별 합계출산율, 조혼인율, 지역별 실업률, 주택매매가격지수, 그리고 경제성장률 데이터를 통제한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범주화

수집된 예산 및 패널 자료는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론과 국내외 선행 연구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변수로 설정한다.

	변수명	조작적 정의	데이터 출처
종속변수	합계출산율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독립변수 1	가족주의 정책 예산	가구의 직접적 예산 제약을 완화하고 직접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정책 예산 비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독립변수 2	탈가족화 정책 예산	돌봄노동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이전하는 보육서비스 인프라 비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통제변수	연령	패널 대상 여성의 만 연령	여성가족패널
	교육수준	최종 학력 상태	
	주택가격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실업률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국가데이터처(KOSIS)
	조혼인율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경제성장률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3)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 분석 모형 및 단계별 전략

(1) 기술통계 및 교차 시계열 상관 분석

- 주요 독립변수인 가족주의 및 탈가족화 정책의 지난 3년간 예산 추이를 선형 그래프로 시각화한다.
-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여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정하고,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분산팽창요인 검정을 실시한다.

(2)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정책 효과성 비교 검증

- 가족주의 정책과 탈가족화 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과 두 정책 간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방정식을 설정한다.

(3) 정책 시차 효과를 반영한 정밀 분석

- 출산 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가족주의 정책은 가구의 예산 제약을 즉각 완화하므로 단기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공공 보육 인프라 구축과 같은 탈가족화 정책은 실제 출산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소요된다. 이러한 정책적 시차 효과를 반영하고 변수 간의 역인과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차 시계열 회귀 모델을 추가로 실행하여 정밀 분석을 수행한다.

## 6. 예상되는 학술적 공헌과 연구의 한계

최근 합계출산율 변화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며, 기존 연구들 역시 서로 상이한 관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최근의 합계출산율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어떤 정책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규명함으로써, 향후 국가 및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한정된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진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사회적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정책 시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합계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이는 정책, 즉 정책적 기여도가 높은 핵심 사업에 복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며, 이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합계출산율 변동에 내재된 다차원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을 완벽하게 제어하여 정책의 순수 효과로만 단정 짓기 어렵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입증되었듯 합계출산율은 경제성장을,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가격, 직종 및 사교육비 등 사회·경제적 지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분석 과정에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외부 요인으로 인한 내생성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정책의 효과가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평균적으로 부의 축적 기간이 짧은 젊은 세대는 현금성 지원(가족주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반면, 중장년 세대나 안정적인 직종의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연령 및 소득 수준별로 정책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종단면 성격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성을 추정함에도 불구하고, 분석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정책 시차와 템포 효과를 완벽하게 분리해 내기 어렵다. 현금성 지원 등 가족주의 정책은 가구의 예산 제약을 즉시 완화하여 비교적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나(Sole, 2024), 육아휴직이나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과 같은 탈가족화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Zimmermann,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최근 1~2년 단위의 단기적인 패널 데이터 변동만으로는 최근의 출산율 반등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미뤄졌던 혼인과 출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출산 시기 조정(템포 효과)'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정책 성공에 따른 합계출산율 증가인지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7.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 (2025). 경제성장률.  
----- (2025). 합계출산율.  
----- (2023). [인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 (2022). 고령자 통계.  
----- (2019). 장래인구추계.
- 국토연구원. (2022).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6).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한국개발연구원(경제정보센터). (2024, 4). 인포그래픽 학령인구 감소에도 늘어나는 사교육비,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혀. 나라경제, 39-39.
- OECD. (2025).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5 Issue 2  
----- (2024). SF2.4: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ECD Family Database.
- 강지원 (2025). 인구정책 대응 재정전략: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용. (2025).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4년 출산율 증가와 출산격차. 한국인구학, 48(4), 1-20. 10.31693/KJPS.2025.12.48.4.1
- 김은정, 이지혜, 김은지, 조선미. (2025).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21)
- 김수정. (2006).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가족과 문화, 18(4), 1-33.
- 김지미. (2018), “한일 복지체제 재편과 가족의 위상 변화: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4(4), 61-91.
- 김지성, 김유민. (2023).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행정·정책학 연구 경향과 과제: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의미형성 관점에서. 국가정책연구, 37(1), 97-122.
- 김태일. (2023).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연구, 32(3), 39-66.

- 김희찬. (2018). 탈가족화 탈젠더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가족정책의 복지정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 류연구. (2007).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에 대한이론적 논의와 탈가족화 수준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0, 259-286.
- 박경량. (2021). 탈가족화 및 가족화 제도가 한국 직장여성의 출산 기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기목. (2017).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지방행정연구, 31(2), 87-116.
- 박진백 (2021).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7.4 : 65-92.
- 백철승, 이경행, 박상혁. (2024).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군 인력 확보 문제와 대응 방안. 문화기술의 융합, 10(4), 451-456.
- 송다영. (2012). 돌봄정책의 국가별 상이성과 젠더관점: 아동보육 부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4(3), 1-33.
- (2014).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한국여성학, 30(4), 119-152.
- 유진성. (2023).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윤수정. (2022).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공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8(3), 47-72.  
<https://doi.org/10.46751/nplak.2022.18.3.47>
- 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0).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서울: 공동체.
- 이승윤, 박고은, 김윤영. (2014). 가족정책의 세 가지 지원유형과 그 조합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213-240.
- 이충환, 신준섭.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지방행정연구, 27(1), 97-124
- 임태경. (2023).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7(2), 147-168.
- 조임곤. (2020).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 현황과 과제. 월간국토, 460, 37-42

전윤정. (2015). 탈상품화 · 탈가족화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일 · 가족양립정책, 1990~2014. 한국여성학, 31(3), 179-218.

정순돌, 김성원. (2012). 사회복지학 분야 ‘고령화 사회’ 연구동향 : 인식과 대책. 사회과학연구논총, 12, 271-297.

차건환, 임수하. (2023).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변화 분석 및 지역활력지수의 산정. 국토지리학회지, 57(2), 111-128

차진아. (2024).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30(1), 285-325

최은희, 조택희. (2016). 패널분석을 이용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사회과학연구.

최정은, 이서현, 오서은. (2026). 양육지원·고용보험 행정자료 결합을 활용한 가구의 자녀 출산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8(1), 386-416.

최준욱, 송헌재. (2010). 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하준. (2025). 고령화 · 저출산의 주요 현안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하혜영, 김예성. (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NARS 입법·정책, 85

허문구. (2022).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한광수. (2024).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제언. 사회법연구,(54), 1-63. 10.22949/kassl.2024..54.001

홍선미. (2024). 지방소멸 현황과 다차원적 위험. 복지동향

황선재. (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황옥경, 송미령. (2025).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6(4), 330-340. 10.5762/KAIS.2025.26.4.330

황은정, 유희원. (2014). 일-가족 양립정책의 유형과 사회·경제적 성과. 여성연구, 87(2), 237-287.

황인도, 남윤미, 성원, 심세리, 염지인, 이병주, 이하림, 정종우, 조태형, 최영준, 황설웅(한국

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한국은행 조사국). (2023).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국은행.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Lewis, J. (1993).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1), 5-17.

Lister, R. (1994). Dilemmas in engendering citizenship. Economy and Society, 23(1), 1-31.

Orloff, A. S.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03-328. <https://doi.org/10.2307/2095903>

Sole, J. (2024). The effect of paid parental leave and a child benefit on fertility. Society of Labor Economists (SOLE).  
<https://www.sole-jole.org/assets/docs/14412.pdf>

Zimmermann, K. F. (2011). Family policy and demographic effects: The case of German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 Demografia, 54(5), 56-78.  
<https://ideas.repec.org/a/nki/journal/v54y2011i5p56-78.html>

澤田 光(2016). 「家族主義的福祉レジームにおける少子化対策」. 奈良女子大学社会学論集 23 95-107

藤間 公太(2014), 「子育ての脱家族化論の問題構制 -「支援」と「代替」をめぐって-」. 慶応義塾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紀要 : 社会学心理学教育学 : 人間と社会の探究(Studies in sociology, psychology and education: inquiries into humans and societies). NO.77, pp. 1-17,

落合, 恵美子(2012). 「東アジアの低出生率と家族主義 : 半圧縮近代としての日本」. 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教授・社会学

山下 順子, 相馬(2024). 「ケア責任への脱家族化政策の影響 -ダブルケア調査からの一考察」. 特集●家族と労働 pp. 15-27,